

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2022. 2.

< 조사개요 >

※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

< 요약 >

① **[규제환경 전망 및 이유]** 2022년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

- ▶ 2022년 기업규제 전망지수(RSI; Regulation Survey Index)란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하여 지수화 한 체감규제 전망지표
 - ※ 100(전년과 동일)을 기준으로 100을 하회하여 0 에 근접할수록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100을 넘어 200에 가까울수록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 2022년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 '사회 양극화 및 반기업 정서 심화'(20.8%) 순으로 응답

② **[업종별 전망]** 2022년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과 '**철강**'인 반면,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가장 긍정적

- ▶ 기업규제 전망지수(RSI)가 가장 낮은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으로 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그 다음으로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건설 및 철강 업종 기업들이 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
- ▶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하여 올해 규제 환경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통산업군 기업보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환경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③ **[지역별 전망]**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 반면, '**세종**'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

- ▶ 지역별로 광주의 RSI가 62.5로 가장 낮게 분석되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 그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 '대전'(77.8) 순으로 집계됨.
- ▶ 반면, RSI가 100을 초과한 지역은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 순으로 조사됨.

④ [이슈별 평가] 2022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큰 업종은 건설,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 조선·해운 순으로 분석됨.

▶ 올해 예상되는 규제 이슈별로 기업의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법'(3.48)이며, 그 다음으로 '법인세(최고세율 27.5%)'(3.36), '주52시간제'(3.30), '최저임금'(3.26) 순으로 집계됨.

* 1점(부담 없음)부터 5점(매우 부담)까지 규제에 의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지수

▶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지수가 높은 업종은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 전체 12개 중 8개 업종(66.7%)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을 기업 부담 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로 평가

⑤ [차기정부 정책과제] 차기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제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을 가장 높게 응답

▶ 그 밖에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는 'One-in, Three-out Rule*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순으로 집계

*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⑥ [규모별 전망 및 규제개선 의지 평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도 더 낮게 평가

▶ 규모별 RSI는 '300인 이상'(97.7), '50~299인'(91.9), '10~49인'(90.2) 순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져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 기관별 규제개선 의지를 평가*한 결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3점 미만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기관별 규제개선 의지를 낮게 평가함.

* 규제개선 의지를 1점(매우 약함)부터 5점(매우 강함)까지 평가한 점수

[중소기업] 국회 2.77점, 중앙정부 2.80점, 지방정부 2.81점

[대기업] 국회 2.86점, 중앙정부 2.86점, 지방정부 2.86점

1

2022년 기업규제 전망지수는 93.3으로 기준치를 하회하여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과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을 가장 높게 선택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기업규제* 전망지수는 기준치(100=전년수준)를 하회한 93.3으로 올해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 기업규제란, 입법·행정행위로 법령, 조례, 시행규칙,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구두 행정지도를 포괄하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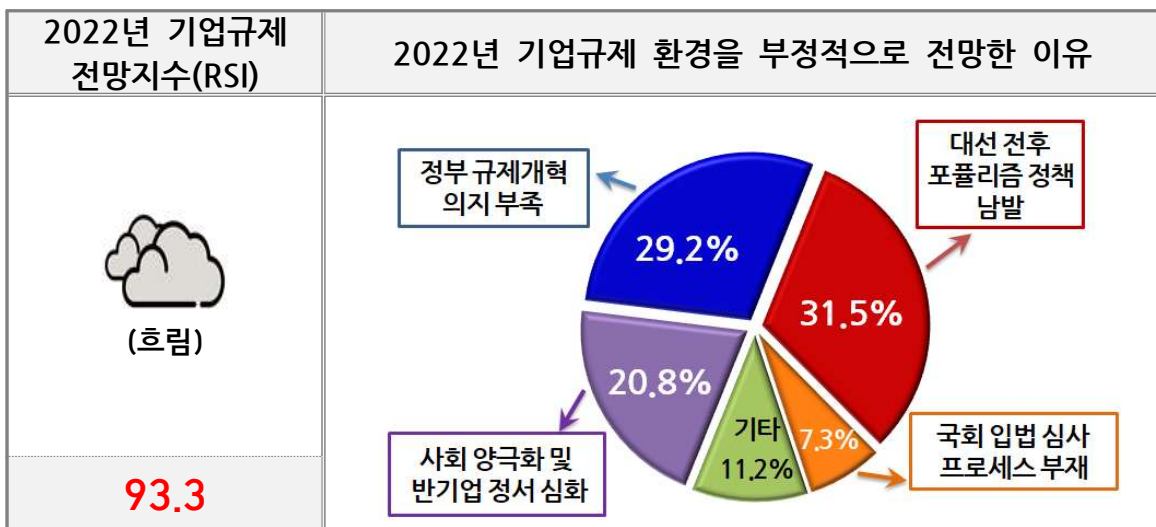
○ 기업규제 전망지수(RSI; Regulation Survey Index)란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체감규제 전망지표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

$$*RSI \text{ 산출방식} = \left[\frac{\text{'규제환경 개선 예상' 기업수} - \text{'규제환경 악화 예상' 기업수}}{\text{전체 응답기업수}} \right] \times 100 + 100$$

※ 100(전년과 동일)을 기준으로 100을 하회하여 0에 근접할수록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100을 넘어 200에 가까울수록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올해 전반적인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과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

[그림 1. 2022년 기업규제 환경 전망 및 이유]



※ '모름/무응답' 비율은 제외

2

2022년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 '철강'인 반면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가장 긍정적

□ 2022년 기업규제 전망지수(이하 RSI)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73.4)과 '철강'(77.5)이 가장 낮게 나타나 기업규제 환경 악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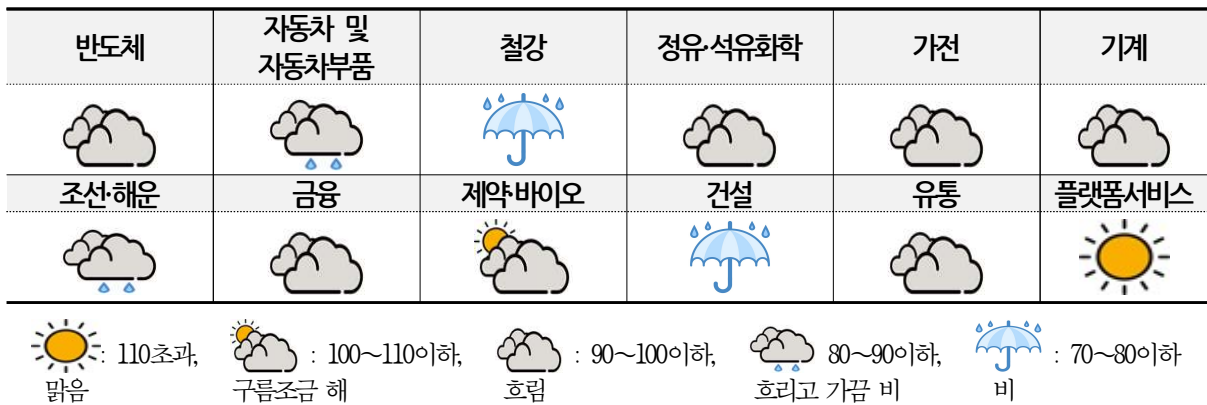
○ 그 다음으로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건설 및 철강 업종 기업들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

○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하여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통산업군 기업보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 환경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그림 2. 2022년 업종별 기업규제 기상도]



< 표 1. 2022년 업종별 기업규제 전망지수(RSI) >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정유·석유화학	가전	기계
91.9	89.4	77.5	95.6	90.5	92.9
조선·해운	금융	제약·바이오	건설	유통	플랫폼서비스
87.2	95.5	105.6	73.4	99.4	114.1

※ 100(전년과 동일)을 기준으로 이를 하회하여 0에 근접할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100을 초과하여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3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 반면 '세종'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

□ 지역별로 광주의 기업규제 전망지수(이하 RSI)가 62.5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고, 전국 평균(93.3)보다 30.8p 더 낮게 집계되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

※ 광주는 '21년 6월 철거 중 건물의 붕괴 참사에 이어 '22년 1월 신축아파트 현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그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 '대전'(77.8) 순으로 분석됨.

○ 반면 RSI가 100을 초과한 지역은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으로 조사되어 전년보다 규제환경 개선 전망

※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 센터 구축을 완료('21년)하고, 자율주행차 및 로봇 산업 육성을 추진 중

[그림 3. 2022년 지역별 기업규제 기상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국 평균

☀ : 110초과, 맑음
 ☁☀ : 100~110이하, 구름조금 해
 ☁ : 90~100이하, 흐림
 ☁☔ : 80~90이하, 흐리고 가끔 비
 ☔ : 70~80이하, 비
 ☔☔☔ : 70이하, 찬등·반개 비

< 표 2. 2022년 지역별 기업규제 전망지수(RSI)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102.9	81.8	84.8	106.7	77.8	62.5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83.3	100.0	100.0	86.2	101.9	70.0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국 평균
81.0	106.8	82.4	95.1	110.7	93.3

4

2022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큰 업종은 건설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순 업종별 12개 중 8개 업종에서 동 규제 기업 부담지수 1순위

□ 규제 이슈별*로 2022년 예상되는 기업 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높게 분석됨.

* ① 중대재해처벌법, ② 주52시간제, ③ 최저임금, ④ 환경규제, ⑤ 법인세, ⑥ 상속세, ⑦ 개인정보보호, ⑧ 지배구조규제, ⑨ 공정거래규제, ⑩ 기술규제, ⑪ 자금조달, ⑫ 입지규제

※ 기업 부담지수란, 규제로 인해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에 대한 점수로 1점(전혀 부담 없음)부터 5점(매우 부담)까지 평가한 수치 의미

○ 12개 규제 이슈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법인세», 「주52시간제」 순으로 높게 집계됨.

< 표 3. 2022년 규제 이슈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 >

규제 이슈별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자금조달	환경규제
기업 부담지수	3.48	3.36	3.30	3.26	3.25	3.15
규제 이슈별	상속세	기술규제	공정거래규제	지배구조규제	입지규제	개인정보보호
기업 부담지수	3.17	3.06	3.04	3.02	3.01	2.99

○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지수가 높은 업종은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 12개 중 8개 업종(66.7%)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게 분석됨.

○ 전체 12개 중 4개 업종(가전, 금융, 유통, 플랫폼서비스)을 제외한 8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로 평가

< 표 4. 2022년 업종별 가장 기업 부담이 큰 규제 이슈 >

업종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정유·석유화학	가전	기계
규제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중대재해처벌법
업종	조선·해운	금융	제약바이오	건설	유통	플랫폼서비스
규제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정보보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상속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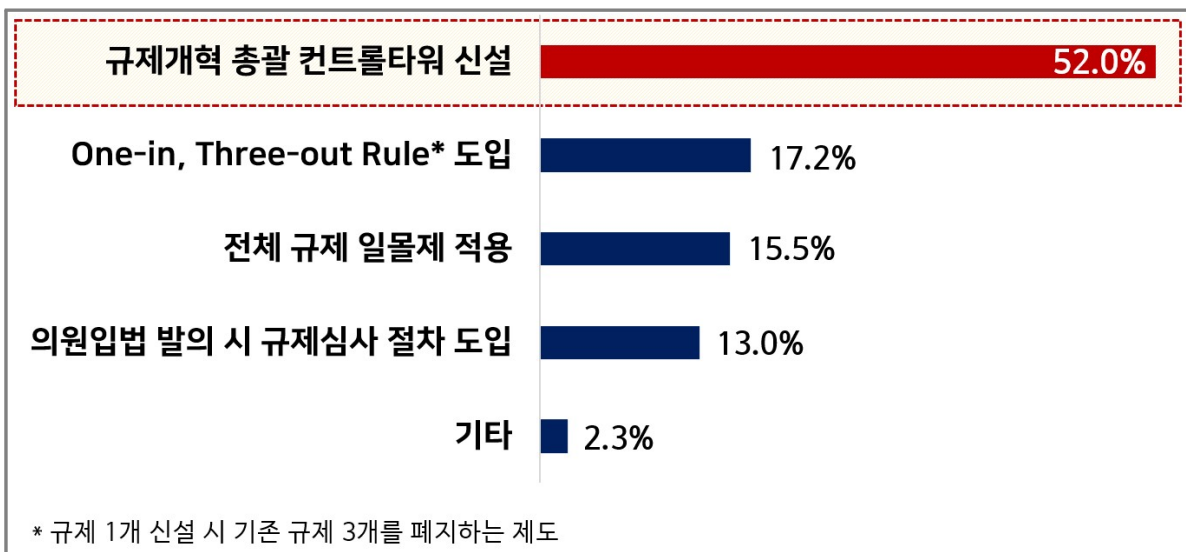
5 차기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제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52.0%

-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 타워 신설'(52.0%)을 가장 높게 선택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규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입장이 상이할 수 있고, 총괄적인 규제개선 추진이 미흡하여 실제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21.5, 경총 회원사 인터뷰 中)

- 그 밖에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는 '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순으로 집계
- 기타 의견으로 '획일적인 규제 적용보다 업종 및 직무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정부 간섭이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기업친화적 정책이 없고, 노동친화적 정책이 많아 애로가 있다' 등 존재

[그림 4. 차기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제]



6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도 낮게 평가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RSI가 낮아져서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 기업 규모별 RSI는 '300인 이상'(97.7), '50~299인'(91.9), '10~49인'(90.2) 순으로 집계되어 규모가 작을수록 향후 규제환경을 더욱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표 5. 2022년 규모별 기업규제 전망지수(RSI) 〉

구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49인	50~299인	
응답기업 수	804개사	92개사	712개사	308개사
RSI	91.7	90.2	91.9	97.7

□ 기관별 규제개선 의지를 평가(5점척도)한 결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3점 미만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대기업(300인 이상)보다 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 기업들이 기관별 규제개선 의지를 1점(매우 약함)부터 5점(매우 강함)까지 평가한 결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3점 미만이었으며, 국회가 가장 낮은 점수로 집계되어 규제개선 의지를 낮게 평가함.
-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대기업(300인 이상)보다 각 기관별 규제개선 의지를 더 낮게 평가함.

〈 표 6. 2022년 기관별 규제개선 의지 평가 점수(5점 척도*) 〉

구분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국회	2.79	2.77	2.86	
중앙정부	2.82	2.80	2.86	
지방정부	2.82	2.81	2.86	

* 기관별 규제개선 의지를 1점(매우 약함)부터 5점(매우 강함)까지 평가한 점수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2022년 국내 기업들이 예상하는 업종별 및 지역별 기업규제 환경 전망과 주요 이슈별 규제 부담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분석대상

12개 업종별, 17개 지역별, 10인 이상 기업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1,112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3. 조사기간 : 2022년 1월 3일 ~ 2월 4일

4.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인터뷰(CATI), 이메일

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2.92\%p$

6. 주요 조사항목

- 2022년 업종별 및 지역별 규제환경 전망
- 규제 이슈별 기업 부담지수, 차기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 등

7. 회수업체 수

구분		회수업체 수
전체		1,112개사 (100.0%)
기업 규모별	300인 이상 기업	308개사 (27.7%)
	50~300인 미만 기업	804개사 (72.3%)